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듭시다”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문창기 국장), 010-8803-1832, 042-331-0092

제 목 / 대전시교육청 감사원 감사청구

보 도 자 료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0년 3월 17일(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초등 6학년 진단평가 실시 파행에 따른 예산 낭비, 초등교육과장의 사무처리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수업권 침해,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관리감독 소홀 및 사후처리 부적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2. 대전시교육청은 교과부 계획에도 없는 초등 6학년 진단평가를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시험문제표절 문제로 인해 당일 시험을 취소했습니다. 2008년에 사용된 문제를 사용하며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6학년 진단평가를 왜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그리고 시험 당일에서야 취소결정을 내린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예산낭비와 학생들의 학습권침해 등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한 손실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을 지기는 커녕 별 문제 될게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전전교조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바른 교육행정을 위해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이번 일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기사님들의 관심과 취재부탁드립니다.

붙임]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1부

감사청구 이유 1부 끝.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0. 3 . 17.

1. 청구 단체	단체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재지	대전 중구 선화동 184-22			
	대표자	이 현 주 (인)			
	단체설립목적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 등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권력감시 및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			
	허가신고등록기관	대전광역시			
	회원의 수	897명	조직년월일	1995년 4월 28일	
	연락전화 등	전화	042-331-0092	팩스	042-252-6976
2. 감사대상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3. 감사청구 제목 : 2010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 6학년 진단평가 실시파행에 따른 예산낭비, 초등교육과장의 사무처리 위법 또는 부당행위,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관리감독 소홀 및 사후처리 부적절에 대한 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1. 2010년 3월 9일 대전시 관내 초등 6학년 진단평가 실시 파행에 따른 예산낭비. 2.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의 사무처리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초등 6학년생의 수업권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 3.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관리감독 소홀 및 사후처리의 적절성 여부				
5. 청구 이유	별도 작성				
6. 관련 증거 자료	첨부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문3장(2010.02.26/2010.03.02/2010.03.09) 첨부2. 2008년 실시된 전국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문제 사본과 2010년 3월 대전광역시교육청 6학년 진단평가 문제 사본 첨부3. 2010년 3월 9일 진단평가 취소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해명자료 첨부4. 관련언론보도 첨부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평가 예산자료.				

※ 단체등록증 필히 첨부

감사청구 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10년 3월 9일,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치를 예정이던 진단평가를 시험 당일 아침에 전격 취소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시험 당일 아침 8시 20분쯤 교육청으로부터 “교과부 지시로 6학년 진단평가를 취소하고, 시험지는 교감이 책임지고 보관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6학년 학생 및 교사들은 학교에 나와서야 시험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시험 준비만 하고 수업 준비를 하지 않은 탓에 사실상 5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학사과행이 초래되었습니다.

시험 전날(3월 8일)만 하더라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전교조대전지부의 항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내일(3월 9일) 초등 6학년 진단평가는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험 당일 아침, “교과부 지침에 따라 초등 6학년 자체 진단평가는 치르지 않기로 했다”며 돌연 시험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더니 몇 시간 후에는, “2008년 실시된 전국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문제를 그대로 사용해서 중단했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대전시교육청은 9일 오후 되늦게 <초6 진단평가 보류 사유>라는 제목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어, “대전시교육청은 6학년 평가문제가 2008년에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시행한 문제로 문항의 타당도나 신뢰도가 높아 활용하기로 했으나 이미 출제가 됐던 것이라 이를 접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보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교육을 책임져야 할 시교육청이 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틈만 나면 “청렴1위, 학업성취도 종합1위, 시도교육청평가 최우수” 등의 수식어를 앞세우며 치적 홍보에 여념이 없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입니다. 진단평가를 둘러싼 행정 난맥상이 드러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말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잘못은 명백한데, 이 엄청난 학사과행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에서 내려 보낸 2010년 2월 26일 자 공문에는 초등학교 6학년 진단평가 실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흘 뒤 3월 2일 자 공문에는, 3월 진단평가 시행계획(대구시교육청 주관: 초등 3~5학년, 중 1~2학년 대상)에 중3과 더불어 초등 6학년 학생들이 시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초등학교 6학년 대전광역시 자체 진단평가 시행계획은 2월 26일 이후에 비로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체 평가문항을 출제할 시간이 없었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자신들이 출제분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

려진 2008년 서울시교육청 주관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6학년 시험지를 그대로 가져다 인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평가문항은 홀수형, 짝수형의 차이만 있을 뿐 즉, 문항의 배열 순서만 다를 뿐 100% 똑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이라는 국가 행정기관에서, 대전광역시 관내 130개 초등학교 학생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 문제를 과년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사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감 및 교육청 관료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평가문항이라 하더라도, 저작물 재사용에 따른 전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동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최소한 기출문제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청 간 협의과정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에 따르면, “2010년 초등 6학년 진단평가 문제를 2008년 실시된 전국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기출문제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평래 초등교육과장 전결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초등교육과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험문제를 출제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으면서 왜 굳이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초등 6학년 진단평가를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했는지, 왜 이런 중차대한 정책 사안을 교육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재해 추진하였는지, 그리고 시험 당일 아침에서야 돌연 시험 취소결정을 내린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감의 지도감독 소홀 및 직무 유기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문제 표절과 시험 당일 전격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초등교육과장 개인의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관련 사실을 언제 알았고,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사후 처리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합니다. 실무 책임이 비록 초등교육과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도 지도·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의 부당한 행정 행위와 사무 처리로 인해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2만여 학생들이 우왕좌왕 교실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랴부랴 땀질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학사파

행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교육청을 믿고 대전 교육에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이 시험 당일(3월 9일) 초등 6학년 진단평가를 전격 취소하는 바람에 무려 2만부의 시험지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시험지 인쇄비 13,000,000원이 낭비되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인해 낭비된 것입니다. 관련자 문책 및 징계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번에 물의를 빚은 진단평가는 물론이고, 2010년 향후 학력평가 시행과 관련한 예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낭비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처리의 적절성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평가 기출문제 베끼기와 시험 취소’라는 일련의 사태로 공교육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성의 있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만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 사과는커녕 학사과행, 예산 낭비,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등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 차원에서 적절한 사후처리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